

“자금경색 불 끄려다 옮겨 붙을판” 기업·은행, ‘동반도산’ 공포 확산

기업대출금리 9년만에 사상 최고
이자 부담 커지며 부실 가능성 ↑
시중은행, 기업대출잔액 ‘깍춤’

최근 기업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가운데 자금경색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업들과 은행의 ‘동반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 발(發)로 기업들의 돈줄인 채권시장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고금리에도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시중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 금리는 4.87%다. 2014년 1월(4.88%)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올린 것을 고려하면 10월에 중소기업에 실행된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보면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40.6%에 달해 1년 전(3.1%)과 비교하면 13배가 넘었다. 반면 금리가 3% 미만인 대출은 전년 같은 달 56.5%에서 올해 9월 4.7%로 급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역대급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올머 겨자먹기’로 은행을 찾고 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 대출 외엔 자금을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잔액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행)의 10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중소기업+대기업)은 704조67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1%나 증가했다. 하나는행이 13.8%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13.5%, 12.6% 늘어나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9월 말 현재 중소기업대출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조 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23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기업대출부실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한은행은 기업대출 고정이자여신이 5829억원으로 1.8% 늘어 조사 대상 은행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해당 금액 역시 5128억원으로 6.2% 증가했다. 고정이자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넘게 연체된 사례를 통



중소기업대출금리가 8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 금리 5% 이상인 대출 비중이 1년 새 전체 3%대에서 40%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뉴스

칭하는 것으로 통상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행은 4175억원, 우리은행은 3598억원으로 각각 8.9%와 11.3%씩 기업대출 고정이자여신이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대출금리는 더욱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소기업대출금리는 5% 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연 9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

게 된다.

고금리에 최근 단기 자금 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흑자를 내는 중소기업도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권이 부동산 PF를 중단하면서 브리지를 본 PF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착공하지 못하면 결국 브리지는 100% 손실로 남게 되고, 이자 등 금융비용만 발생하게 되면서 줄도산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1면 '내년부터 성장률...'서 계속

“내년 경제 더 악화될 것... 금융권, 자체 위험관리 집중해야”

금융연구원 금융동향 세미나
금리인상 지속, 소비심리 위축 전망

우리 경제 성장세가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이어가고,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반등 모멘텀도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초부터 금리상승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은 차주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충격흡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실장은 “올해 전 세계가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융불안이 확대돼 연말로 갈수록 성장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실장은 내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며, 고용 둔화와 함께 소비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나유리 기자

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해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렸다. 내년 기준금리를 5%까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금리인상기에는 그 동안 누적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더라도 그 자체가 민간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올해 4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은 민간소비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부정적 효과가 내년 주로 반

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자산시장을 통해 국내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리랑카, 잠비아 등 신흥국은 코로나 19 대응 이후 부채증가를 관리에 들어간 선진국과 달리 부채증가세가 높

다. 지난 2018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글로벌 주식·채권 등 선진국 투자금이 연쇄적으로 신흥국에서 이탈하면서 국내의 외국인 증권자금(6.2조원)이 소폭 유출된 바 있다. 2015년에는 중국 주가 및 위안화가 급락하며 약 16조원의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출됐다. 국내

주가가 중국 및 신흥국 지수와 동조성이 있는 만큼 신흥국의 위험자산 급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실장은 또 금융업권별로 차주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충격 흡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 고(高)DSR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2022년 6월말(1.75%)보다 2.25%p 증가할 경우 DSR 70 이상 차주의 비중은 9.2%에서 11.9% 증가하고, DSR 70 이상인 차주의 잔액 비중은 12.4%에서 19.6%로 늘었다.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이 18.89%에서 21.74%로 가장 높았고, 차주의 잔액비중은 조합이 26.79%에서 38.96%로 높았다.

박 실장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권에서 DSR 70 이상 차주의 잔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축은행과 조합의 경우 DSR 70 이상인 차주의 잔액비중이 전체 대출중 30~40%까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는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차주별 부채상환 스케줄을 점검하고 부채관리를 독려하는 등 자체적 위험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장기적인 구조개혁으로 노동공급 감소 대응해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경제성장률의 시나리오는 달라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됐다. 반면,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머무를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0%로 성장 동력이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해 돈 풀기 등 단기 대응책을 쓰기 보다 성장률 하락에 대비,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경영 효율화 추세... 당분간 현상태 지속될 것”

>> 1면 '너도나도 빠른배송...'서 계속

위메프 역시 대대적인 해택을 내걸었음에도 지난 7월 월간 사용자 수(MAU, 안드로이드+앱스토어)는 693만명으로 2020년 3월 1145만명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티몬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41.7%에서 -58.9%까

지 악화됐으나 올해 상반기 괄목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e커머스 업계는 현재 당면한 거래액 성장세 둔화, 경쟁에 따른 비용 지출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마땅히 찾지 못한 상태다. e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는 e커머스가 코로나 19로 인한 고객의 불편과 제약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17조7196억 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16.6% 증가해 올해 전체적으로는 3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 전인 2019년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17조원이었다.

반면 엔데믹을 맞은 현재 e커머스 기업은 고객이 마주한 새로운 불편함을 마땅히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쇼핑 외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흥

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규모 매출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명품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으나 이 또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사태와 더불어 시장 플레이어가 계속 늘며 마케팅 비용 상승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만큼 오히려 경영 효율화에 들어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